

2025년 12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음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12/7	[뉴스10] 쿠팡서 3천만 고객 정보 유출..."5개월간 몰랐다" [뉴스센터] 쿠팡에 2개 계정으로 협박메일 2회...경찰 "해외 기관 공조"	
최미연	12/14	[뉴스24] 통일교 관계자, 한학자 재판서 "민주당 인연 노력" [뉴스오늘] 특검 "통일교 '민주당 후원' 수사 대상 아냐...다른 기관 인계 예정"	
최미연	12/21	[뉴스현장] 내란특검 "반대 세력 제거, 권력 독점 목적 계엄 선포" [뉴스1번지] 경찰, '통일교 금품' 전방위 압수수색...한학자도 입건	
김정원	12/28	[와이드08] MZ, 영포티, 끈대...호칭으로 표출되는 세대 갈등 [뉴스오늘] "스마트 기술로 산재예방"…건설사 안전대책 마련 분주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전 · 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최미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 07. 25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5 12/7(일)	김홍태	지난 달 30일 와이드11에서는 국내 1인 가구가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라면 1인 가구는 오는 2042년쯤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이란 추산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진입이라는 핵심 통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식	1인 가구 문제는 고독사 등 여러 이슈와 연관이 돼 있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통계에 근거해 1인 가구 비중과 향후 전망, 노인 인구 규모 등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보도량을 늘려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주거와 복지 그리고 고립과 안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고령화가 연금과 의료체계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결국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의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는 메시지들은 계속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2025 12/14(일)	<p>중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프로세스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전략은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방향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봄. 서방세계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부가 새로 발표한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책으로 동맹이 약화하는 모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정치적 해결과 평화·안정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은 이로인해 중국은 한반도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일본 압박 강화가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지역 안보 구도에 파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직접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한일·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는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이탈 조짐과 한국 정부의 대화 복원 시도를 별별적으로 보여주었</p>	<p>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적 딜레마, 즉 국제사회는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끌기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핵심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정책 발표나 외교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이 미·중·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짚어주는 분석 보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한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과 사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범죄가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국가 차원의 협력에 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통문 시술로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함께하는 두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논의 외에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과 라오스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통해 증거수집과 현지 조사 시 양국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연합뉴스TV는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를 넘어 초국가 범죄 대응이라는 구체적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며 시의성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체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명확히 전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제도 이행 과정이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p>

		실 전달에는 충실하나, 국제범죄 대응의 구조적 배경과 과제를 함께 짚는 보완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 12/28(일)	김정원	<p>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만큼이나 무섭게 치솟은 건 월세 비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캡투자가 차단되고 전세 대출 문턱도 높아진 게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월세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보다 10% 넘게 뛰었습니다. 토지구역으로 둘인 뒤 나온 매물 비중도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관련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 월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했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 6천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00만 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지금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현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사례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그쳐 해법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월세 급등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논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단기 대응책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문제 지적을 넘어 해결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p>	<p>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상 전달에 그치지 않고 대책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더 신경써서 보도록 더 신경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p>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5. 12. 0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3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합니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달 30일 뉴스10에서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수가 3,37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실상 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데요, 지난 18일까지만해도 개인정보 4,500개가 노출됐다고 밝혔는데, 9일만에 유출 규모가 7,500배 확대된 거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이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쿠팡은 앞서 이 사고를 지난 달 18일 인지하고, 지난 달 20일과 지난 달 29일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인데요, 배송 주문 당시 입력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도 노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쿠팡은 결제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조사 결과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겠다고 밝혔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며, 경찰도 지난 25일 쿠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과정에서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내부 직원의 소행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지만, 쿠팡이 접수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자'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통신사와 금융기관, 코인 거래소에 이어, 쿠팡 정보까지 해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도는 그 규모와 심각성을 명확하게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 그리고 경찰 등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신속한 조치 상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출 경위와 내부 통제 문제, 5개월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는 앞으로 상세한 추가적 보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안은 기업 책임이지만, 결국 그 피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고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큰 문제 인데요, 추가적으로 쿠팡의 보안 시스템의 문제 특허나 국내 주요 플랫폼이 왜 반복적으로 정보 유출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출이 국민에게 어떤 위험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청자들에게는 쿠팡을 사칭한 퍼싱 문자나 전화를 주의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과 결제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로그인 기록을 살피는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였습니다. 뉴스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측이 협박 메일도 수차례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기관과 공조도 진행 중이라는데요, 서울경찰청이 지난 1일 오전 경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쿠팡 측이 지난달 16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첫 번째 협박 메일은 쿠팡 사용자에게 보내졌는데, "이름과 주소, 쿠팡 구매 품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민원을 제기해 알게 됐으며, 두 번째 메일은 쿠팡 고객센터로 직접 협박이 들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메일을 보낸 계정은 2개인데요, 이들이 동일 범인인지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후와 같은지는 경찰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메일 경로 등을 수사하기 위해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서 쿠팡 측은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이에 현재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기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고 이미 내사에 착수했던 걸로 나타났는데요, 고객 민원에서 고소장 접수까지 일주일 넘게 걸린 걸로 드러나면서 쿠팡이 사태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쿠팡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필요시 수사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사고를 넘어 협박 메일까지 이어진 것은 매우 심각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위 보도에서는 협박 메일이 고객과 고객센터로 각각 도달한 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있으며, "내사 착수 시점", "고소장 접수 전후 상황" 등을 통해 사태 은폐·축소 의혹까지 짚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협박 메일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2차 피해 가능성이 어떤 내용일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으며, "내부자 소행 추정" 보도는 좀 더 명확히 파악해 다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에서는 보안 시스템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 그리고 내부나 외부에서의 해킹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달 30일 와이드11에서는 국내 1인 가구가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인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이라면 1인 가구는 오는 2042년쯤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이란 추산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 명에 달했는데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 진입이라는 핵심 통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근거해 1인 가구 비중과 향후 전망, 노인 인구 규모 등을 전달함으로써 사회 구조 변화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만 더 보도량을 늘려서 1인 가구의 증가가 주거와 복지 그리고 고립과 안전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초고령화가 연금과 의료 체계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결국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의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는 메시지들은 계속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1에서는 지난달 미국의 관세 영향 우려에도 우리나라 수출이 11월 중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전체 수출이 6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610억 달러로 역대 11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작년 같은 달 대비 8.4% 증가했으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고 합니

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수출 실적을 견인했으며, 11월 전체 한국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AI 확산으로 반도체 수출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데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반도체 단가가 내년에도 일정 정도 잘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있고, AI 서버, 데이터 부분들의 수요가 많고 공급 물량 확대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어 내년에도 반도체 수출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우려했던 자동차 수출도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차 판매로 반등했는데요, 특히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다른 나라로 수출을 다변화하면서 회복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수출은 공급 과잉 속 관세 직격탄을 맞으며 작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데요,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미국과 중국 비중은 좀 약해지는 면이 있지만 다른 나라 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자동차가 현지 생산이 더 이뤄지고 있어서 다른 품목들도 현지 생산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간 누적 수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올해 수출 목표치인 7천억 달러 고지 달성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11월 수출이 호조라면서 수출 실적의 주요 성과를 통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이 상승한 원인이라는 것과 미국 관세 우려 속에서도 성과가 유지된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망까지 제시한 것은 상당히 유익해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자동차 호조 뒤에 가려진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부품 업종의 침체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침체가 우리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공급 과잉과 미국 관세가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부담에 대하여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우리 수출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반도체 편중 구조의 문제점과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에 따른 영향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12. 14.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73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정 증언과 특검 판단, 그리고 전진법사 전성배 씨의 녹취까지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관련 진술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학자 총재의 재판에 출석한 통일교 지역 관계자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인은 통일교가 특정 후보나 보수 진영에만 국한돼 정치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해당 사안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진술에 대해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향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성배 씨 재판에서 전 씨가 통일교 간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통일교 덕분”이라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통화에는 “김건희 여사도 이를 납득했다”는 발언도 포함됐으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선물 다섯 점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도는 통일교가 여야 정치권 전반과 폭넓게 접촉해 왔다는 정황, 특검의 제한된 수사 범위 판단, 그리고 건진법사 발언이라는 자극적 증거를 나란히 제시하며 사건의 외형적 과장은 비교적 충실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정치 개입이 구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민주주의적 위협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대상 아님’ 판단이 법률적으로 어떤 한계를 지니는지, 그로 인한 수사 공백이 어떤 문제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정국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대치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과장을 불러올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대신 비행점 민생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 내부는 물론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개혁 기조를 유지하는 한 어떤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본회의 처리 과정 전반이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서 과행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의 위헌 소지를 보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청래 대표는 필요한 수정은 과감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독재 악법으로 규정하며,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장시간 의원총회와 함께 의원 60명씩 교대 투입하는 필리버스터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는 사법개혁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양당의 정치적 충돌 구도를 중심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 조절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은 각각의 정치적 전략으로 설명되지만,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의 구체적 내용과 위헌 논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법개혁이 현법 질서와 시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향후 보도는 정당 간 공방을 넘어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구조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 불안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집단소송과 ‘탈팡’ 현상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이탈, 이를바 ‘탈팡’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피해 소비자들은 쿠팡의 미흡한 사후 대응에 실망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 구도 변화 가능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반쿠팡 연대’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 1위 교체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용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 이후 5개월 동안 별도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쿠팡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

유로 사과에만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용자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담 수사팀과 수사관을 투입해 유출 경로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고객 3,370만 명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했으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 주문 정보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도는 이용자 불안에서 집단소송, 그리고 고객 이탈과 시장 영향으로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사안의 과급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소비자 분노와 ‘탈팡’ 현상을 중심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잘 부각했습니다. 다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제도적 대응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하다는 한계도 드러납니다. 향후 보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경영진의 실제 법적 책임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과 정부·감독기관의 제도적 대응까지 함께 점검하는 구조적 보도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프로세스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을 둘러싼 외교·안보 전략의 방향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봅니다. 지난 8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새로 발표한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삭제하고 정치적 해결과 평화·안정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동북아 안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일본 압박 강화가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지역 안보 구도에 과장을 줄 가능성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고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조정은 직접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며, 대북 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한일·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는 북한 핵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이탈 조짐과 한국 정부의 대화 복원 시도를 병렬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적 딜레마, 즉 국제사회는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 읊기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비핵화와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는 핵심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보도는 정책 발표나 외교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데서 나아가, 한국이 미·중·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짚어주는 분석 보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최미연 시청자평가원(25. 12. 21.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3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최미연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둘러싸고 경찰이 통일교 시설과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종

교단체와 정치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수사가 본격화되며 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수사 내용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군·대통령실 인사들과 모의·준비됐으며, 북한 도발 유도와 국회 정치활동을 반국가행위로 규정하는 등 명분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을 기소했고, 일부 사건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통일교의 정치권 명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와 가령 천정궁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전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도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다만 관련 인사들은 모두 불법적인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규환 전 의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개인 일탈이 아닌 한 총재 지시에 따른 조직적 뇌물 공여 가능성으로 보고, 한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압수수색 현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비교적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과 정치권 인사를 동시에 다루며 수사의 범위와 구조를 분명히 보여준 점은 의미가 있으나, 혐의 입증의 핵심이나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설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달과 속보성에는 강점이 있지만, 의혹의 성격과 향후 수사 방향을 해설하는 맥락 보도가 보완된다면 시청자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라오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초국가 범죄 대응과 사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범죄가 증가하며 그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국이 국가 차원의 협력에 뜻을 모았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통로 시술렀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을 함께하는 두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논의 외에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과 라오스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통해 증거수집과 현지 조사 시 양국의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연합뉴스TV는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를 넘어 초국가 범죄 대응이라는 구체적 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며 시의성을 잘 살렸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체결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명확히 전달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제도 이행 과정이나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명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전달에는 충실했나, 국제범죄 대응의 구조적 배경과 과제를 함께 짚는 보완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국정 운영 전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책임을 분명히 묻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 확대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며 연말 국정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뿐 아니라 산하기관과 실무 책임자에게 직접 질문하며 업무 이해도와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을 국민에게 투명화

해 공개하고, 임기 첫 해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에 혼란과 속도감 있는 국정 운영을 주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번주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주차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성과에는 공개 칭찬을, 허위·부실 보고에는 강한 질타를 병행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 공무원과 정책 아이디어 제안자는 치켜세운 반면, 미흡한 답변과 허위 보고에는 공개 경고를 했으며,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의 두 보도는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라는 새로운 국정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직사회 긴장감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 확대라는 취지를 짚으면서도, 강도 높은 질의와 정치권의 반응을 함께 다뤄 협안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정책 성과가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보완된다면 보도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핵심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과 침묵 속에, 국회는 강력한 제재 입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공적 통제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입법논의 과정을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김범석 쿠팡 의장이 청문회 불출석 등으로 침묵을 이어가며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등 쿠팡을 겨냥한 규제·제재 입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민 3분의 2가량이 피싱 의심 사례가 증가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3개월 내 온라인 쇼핑을 한 전국 만 20~5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9%가 피싱·스팸 증가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비밀번호 변경 등 적극적인 보안 조치에 나선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진행했으며, 방대한 디지털 자료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 국적의 직원 행방과 내부 관리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기업의 책임 회피 논란과 이를 둘러싼 정치·제도적 대응을 균형 있게 짚어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침묵과 청문회 불출석을 중심으로 기업의 책임성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는 한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흐름까지 연결해 사안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쿠팡 측의 구체적 해명이나 반론이 제한적으로 제시돼 있어 핵심의 다층성을 충분히 드러내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성을 공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는 보도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5. 12. 2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73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있는 여러 혐오 현상 중 세대 갈등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MZ, 영포티, 꼬대까지

SNS 등에서 널리 쓰이는 신조어에는 특정 세대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묻어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한 공공기관 직원이 올린 영포티 저격 게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업무 관련 글을 SNS에 올려왔던 40대 공무원은 느닷없는 지적에 근무지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짧게 사는 40대에서 세대를 비하하는 용도로 쓰이게 된 영포티, 표현 하나에 세대 전체가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영포티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자기검열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세대를 조롱하는 표현은 영포티가 처음이 아닙니다. 20대를 통칭하는 MZ세대라는 표현도 어느 순간 MZ스럽다는 멸칭으로 변질됐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MZ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60대 이상도 곧대 소리를 들을까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한 어르신은 곧대로 불린다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자기들은 안 늙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대 간 갈등이 실생활보다는 주로 SNS를 통해 조용히 일상생활에 스며든다고 지적합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퍼지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위축시키며 세대 간 소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세대를 비하하는 호칭이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영포티, MZ, 곧대라는 표현이 자기검열로 이어지고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며, SNS를 통해 확산되는 세대 갈등의 실태를 잘 드러냈습니다. 다만 현상 전달에 그쳐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세대를 비하하는 표현이 퍼지고 있다는 현상을 보여줬지만, 왜 이런 표현들이 생겨나고 확산되는지, 세대 간 갈등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또한 세대 간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나 전문가들의 제언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문제 제기를 넘어 갈등 해소를 위한 논의를 촉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건설 현장 산재가 이어지자 건설사들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특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조회가 한창인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주의 사항을 전파하자 미안마어와 중국어로 실시간 번역이 이뤄집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AI 통역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직접 로프에 매달려 육안으로 해왔던 외벽 균열 점검은 이제 AI 기술이 탑재된 드론의 몫입니다. 안전상의 위험과 작업자 숙련도에 따른 품질 편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사 본사 안전관제상황실에서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 정보 확인과 고위험 작업에 대한 집중 관리가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위험지역에 근로자가 출입하면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스마트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토사 봉괴 가능성 있는 현장에서 무인 굴착기가 작업을 도맡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서 로봇이 볼트를 조이는 건 더 이상 미래 일이 아닙니다. 건설사들의 노력은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안전 예산을 늘리고 CEO 직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질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형 건설사 얘기일 뿐, 중소업체들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보도는 건설사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 도입한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현장 취재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AI 통역 시스템, 드론 점검, IoT 안전관제 등 기술의 실제 활용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노력만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업체의 열악한 현실을 함께 지적한 점이 돋보입니다. 안전이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적절했습니다. 다만 중소업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정부의 정책 계획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해킹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 상당을 보상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보상 규모는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로부터 약 한 달 지난 5월, SK텔레콤 고객 58명은 해킹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했습니다. 약 7개월 만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결정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해킹 피해자 전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이니, 1명당 약 10만 원을 보상하면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SK텔레콤 3분기 매출의 거의 60%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해킹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보상금 규모, 이미 지출한 1조 원 이상의 비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까지 고려했을 때 조정안 수락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합니다. 이 보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 내용과 전체 보상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관점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보상 규모가 SK텔레콤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을 상세히 다뤘지만, 정작 2,300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 피해나 10만 원 보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나 피해자들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보상 적정성 평가 등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더욱 균형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SNS 이용에 매일 2시간 30분 또는 그 이상을 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현상에 주목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11월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하루 평균 1시간 38분 정도였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으로 하루 평균 49분을 사용했고 엑스 36분, 틱톡 30분, 카카오톡 18분 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SNS에 과몰입하는 현상에 주목하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문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는 청소년들의 SNS 이용 시간을 구체적인 통계로 보여주며 과몰입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플랫폼별 이용 시간을 상세히 제시해 청소년들이 어떤 서비스에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명확히 전달했고, 호주의 규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문제 제기에 그쳐 심층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청소년들이 SNS에 많은 시간을 쓴다는 현상을 전달했지만, 이것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나 학업, 대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없었습니다. 또한 호주 사례를 언급했지만 그 정책의 효과나 논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

한 논의도 부족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이나 청소년·학부모의 목소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등이 보완되었다면 단순 통계 전달을 넘어 사회적 논의로 확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만큼이나 무섭게 치솟은 건 월세 비용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캡투자가 차단되고 전세 대출 문턱도 높아진 게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월세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보다 10% 넘게 뛰었습니다. 토지구역으로 뿐만 아니라 나온 매물 비중도 월세가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관련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었습니다. 규제 발표 이후 월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대출 규제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했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 6천 원이었습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이 600만 원가량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20%를 매달 월세로 내야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지금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현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현장 사례로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그쳐 해법 논의가 부족했습니다. 보도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월세 급등으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논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단기 대응책 등이 함께 소개되었다면 문제 지적을 넘어 해결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5년 12월 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5년 12월 14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5년 12월 21일 04시/ 최미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5년 12월 28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